

국가장학금의 한계와 개선방향

(1) 국가장학금의 딜레마: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

□ 국가의 고등교육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가장학금 딜레마 극복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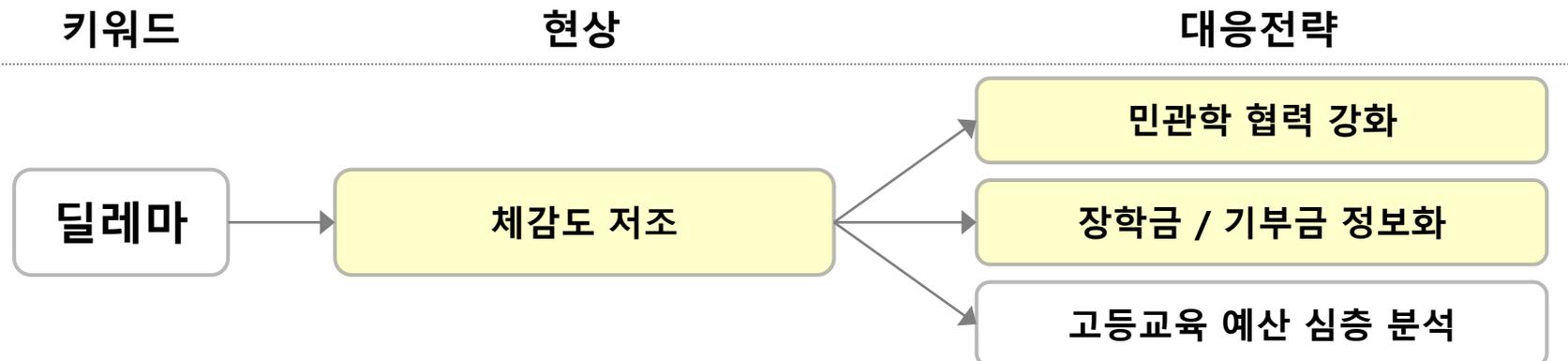
- 국가장학금 딜레마는 예산 대비 국민 체감효과 낮지만 지원 규모를 축소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발생
- 늘려도 체감 효과가 좋아진다는 보장도 없음

□ 국가장학금 딜레마 발생 원인

- Mind gap: 명목 등록금 인하율이 낮아 일반 학생의 체감도 낮은 편 (감사원, '13.6 보고서)
 - 반값등록금에 대한 행정당국과 국민 사이의 인식의 갭이 존재 (총액 vs. 개인 부담)
- 등록금 무상 복지: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 인재 육성 기능이 축소

□ 국가장학금 딜레마는 “협력과 기술”을 통해 극복

- 고등교육 학자금 시장 분석은 기본이고, 고등교육 예산을 심층 분석하여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고등교육 예산 포트폴리오 수립
- 대학 졸업생을 채용하는 기업이 “사회비용”을 지불하는 차원에서 대학생 대상의 장학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, 이를 위해 민관학 협력은 필수
- 국가장학금, 교내장학금, 민간장학금에 대한 통합정보 관리 인프라 구축 시급



(2) 국가장학금의 아이러니

□ 국가의 고등교육 사업이 성공하려면 국가장학금의 아이러니 극복이 필요

- 국가장학금의 아이러니는 부자들의 자녀들이 국가장학금을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 발생
- 중복수혜 스크리닝 하지 못하는 현실

□ 국가장학금 아이러니 발생 원인

- 소득분위 산정 시스템 부적정: 소득·재산, 가구원 정보를 부정확하게 파악·활용 (감사원, '13.6)
- 학자금 누수방지 시스템 부적정: 중복수혜방지 관리 시스템, 부재 (사각지대와 중복지원)

□ 국가장학금의 아이러니는 “인식변화와 정보화”를 통해 해결

- 교육에 대한 과소비 및 과투자를 개선하여 “학자금대출-취업실패-신용불량자” 악순환이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
- 장학금 부정수급 등 누수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학금 관련 정보를 전산화하여 관리

키워드

현상

대응전략



(3) 국가장학금의 패러독스

□ 국가의 고등교육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가장학금의 패러독스 극복이 필수

- 국가장학금 패러독스는 국가장학금을 받아도 등록금과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어서 근로시간은 증가하고, 학점은 낮은 현상
- “국가장학금을 많이 받는 학생일수록 아르바이트를 더 많이 한다” (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지경 연구원) → 저소득층 학생이 국가장학금만으로 생활비와 등록금을 모두 충당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증

□ 국가장학금 패러독스 발생 원인

- 장학금 설계 문제: 원래 반값등록금으로 설계되어 국가장학금-등록금 충당률 낮은 편 (저소득층 전액장학금 부족)
- 고스펙 노동시장 관행: 고스펙 경쟁으로 교육 과소비 및 과투자 만연 (스펙 쌓기)

□ 국가장학금 패러독스는 “협력”과 “인식 변화”를 통해 극복

- 저소득층 성적 우수 학생 대상으로 하는 등록금 전액 지원 + 생활비 지원 장학금을 다수 개발
- 교육 과소비와 과투자에 대한 인식 개선

키워드

현상

대응전략



(4) 국가장학금의 모순 (oxymoron): 쓰긴 많이 쓰는데 성과는

□ 국가의 고등교육 사업이 성공하려면 국가장학금 모순 극복이 필요

- 국가장학금의 모순은 고등교육분야의 재정투자가 대학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상
- 대학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분야에 대한 투자 병행 필요
- 교육분야 중에서 고등교육 분야 재정투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, 그 중 국가장학금 규모도 늘고 있지만, 대학의 경쟁력은 여전히 하위권
 - IMD '대학교육' 순위: 46위 ('10년) → 39위 ('11년) → 42위 ('12) → 41위 ('13년) → 53위 ('14년) → 38위 ('15년)

□ 국가장학금 모순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미스매치 때문에 발생

- 고등교육 예산 10.74조원 중 국가장학금 예산은 3.95조원 (고등교육 예산의 41.8%)로 쓸림 현상 심각
- 분배 전략으로 접근: 등록금 인하/동결되어 대학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 부족

□ 국가장학금 모순은 고등교육 예산 심층 분석을 통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

- 고등교육 예산 심층 분석을 통해 국가장학금 쓸림 현상 완화
- 등록금 부담을 완화 뿐만 아니라 '대학 경쟁력 제고' 전략이 필요

키워드

현상

대응전략



국가장학금 4대 난제 → 민간 장학금 확충 필요

